국제인권 뉴스레터

2018 NOVEMBER [창간호]

인권이사회 제39차 회의 종료

유엔 인권이사회 23개 결의안 및 1개 의장성명 채택

Readmore

유엔 인권최고대표 취임

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 취임

Readmore

발간사

박상기법무부장관님발간사

Readmore

유엔,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 참여 확대 권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20차 회의 종료

Readmore

제73차 유엔 총회 고위급 토론

유엔 총회, 다자주의, 협력, 인권존중 촉구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위원장 선출

Readmore

예멘의 인도적 위기

유엔 전문가 그룹, 예멘 내 전쟁범죄에 대한 보고서 발간

유엔세계식량계획, 예멘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우려 표명

Readmore

유니세프,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아동이 학교폭력 경험한다고 발표

유니세프, 학교폭력 실태 보고서 발간

Readmore

인도, 동성애 처벌 폐지

인도 대법원,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 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

유엔, 인도 대법원 결정 환영

Readmore

유엔,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추진

유엔, 각국정부에 국제이주에 대한 관리 개선 촉구

Readmore

테러리즘과 인권을 둘러싼 논쟁들

유엔 특별보고관, 테이스북의 '테러리즘' 정의 비판, 미국 법원, 인종차별적 테러리즘 용고 기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결

Readmore

유엔, 임신·출산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 촉구

유엔 전문가, 여성의 임신·출산을 포함한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후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

Readmore

NOVEMBER CALENDAR

DECEMBER CALENDAR

JANUARY CALENDAR

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장희석 인권국장 **홈페이지** www.hr.go.kr **디자인** 디엔디피아

일본은 북미회담시 발표된 북미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평양선언에 따라 일본인 납치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하였고, 일본이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한국과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부인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북한의 주장은 사실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일본은 역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난 70년간 역내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 측은 일본은 과거 범죄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기 전 까지는 인권에 대해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Link

Human Rights Council holds a general debate on human rights situations that require the Council's attention (OHCHR. 9.18)

유엔 인권이사회 23개 결의안 및 1개 의장성명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는 3주에 걸친 제39차 회의를 종료했으며, 회기 내 23개 결의안과 1개 의장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25명의 인권 특별보고관 등 전문가의 보고를 들었으며, 40가지 주제로 50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124개의 보고서 발표를 청취했습니다. 채택된 결의안 중 몇 가지 결의안을 소개합니다.

'소농 및 비도시지역민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을 채택하는 결의안이 투표를 거쳐 통과되었으며, 한국은 기권하였습니다. 한국은 투표 전 입장 설명에서, 농업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고 있고, 결의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하나, 결의안의 몇몇 조항이 국내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권한다고 하였습니다.

'제4기 인권교육 세계프로그램 (2020-2024년)'은 청년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가능개발목표 제4조 제7항(인권교육 등 지속가능개발과 관련된 교육 보장)과 연계시켜 특히 평등, 인권과 비차별, 포용과 다양성 존중 관련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결의안이 무표결 채택되었습니다.

언론인에 대한 공격을 처벌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각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무표결 채택되었습니다. 각국이 예멘의 평화적 이행과정(transitional process)에 필요한 역량개발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결의안이 무표결 채택되었습니다. 예멘, 부룬디, 중아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소말리아 인권상황 조사단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표결시 한국은 찬성하였습니다.

Link

Human Rights Council adopts five resolutions, including on Burundi, Syria, and on the Rights of Peasants (OHCHR. 9.28)
Human Rights Council adopts eight resolutions, extends mandates on Yemen, Central African Republic, Sudan and Somalia, and closes its thirty-ninth session(OHCHR. 9.28.)
Human Rights Council concludes thirty-ninth session after adopting 23 resolutions and a Presidential statement (OHCHR 9.28)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에 대한 최종 견해 채택, 재일조선인, 위안부 문제 언급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제69차 회의를 종료하며 일본 등 7개국에 대한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중 일본에 대한 최종 견해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일본 내 소수민족과 관련해서는 재일조선인이 투표권이 없고, 공직에 진출하거나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며, 특정 조선인학교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일조선인에 대한 혐오 표현 및 집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를 규제해야할 혐오 표현(hate speech) 제재 법안의 관할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UN Photo by Violaine Martin

UN Photo by Jean-Marc Ferre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중심 접근법(victim-centered approach)에 입각하여 모든 국적의 위안부 여성들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본정부에게 생존 위안부들에게 정부가 취한 조치를 다음 회차 보고서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했 습니다.

인권 관련 국제규약과 관련해서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ILO 협약(채용 및 직업에 대한 존중, 토착민 관련)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였 습니다.

Link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cludes its ninety-sixth session (OHCHR.8.30.)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tenth and eleventh periodic reports of Japan

메인화면 >>

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황희석 인권국장 **홈페이지** www.hr.go.kr **디자인** 디앤디피아

유엔 인권최고대표 취임

UN Photo by Laura Jarriel

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 취임

Michelle Bachelet 전 칠레 대통령이 제7대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취임하여 9월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Bachelet 대표는 칠레 대통령을 2회 역임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젠더평등부, 인권박물관 등의 기관을 설립하고, 동성간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 시민결합법(Civil Union Act)을 승인하는 등 인권증진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1년에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 초대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공로로 지난 8월 제72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Link

Michelle Bachelet Jeria (OHCHR. 9.1.)

UN Photo by Jean-Marc Ferre

유엔 인권최고대표 유엔 인권이사회 제39차 정기회의 개회 연설

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인권이사회 제39차 정기회의를 개회하며 임기 시작 후 최초 연설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협력에 대한 당부와 함께 특정 국가들의 인권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해, 한반도의 관계 회복 움직임은 북한 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이며, 수백만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에 대한 논의가 다른 사안들에 밀려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인권이사회 결의(A/HRC/RES/34/24)에 따라 현재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를 감시·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유엔 차원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사례를 보존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하고 북한정부의 책임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중국의 위구르족 및 무슬림 차별과 미국의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제 이주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들이 현실을 반영한 이민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유럽연합은 지중해를 건너는 이주민들을 구하기 위한 인도적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사회는 국가 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회원국들에게 날선 논쟁을 벌이거나 이사회를 탈퇴하기보다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ink

Human Rights Council opens thirty-ninth regular session (OHCHR. 9.10.)
Opening Statement by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ichelle Bachelet (OHCHR. 9.10.)
New UN rights chief pledges to push back on 'centuries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UN News. 9.10.)

메인화면 >>

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황희석 인권국장 **홈페이지** www.hr.go.kr **디자인** 디앤디피아

2018 NOVEMBER [창간호]

국제인권 뉴스레터

법무부 인권정책과

제73차 유엔 총회 고위급 토론

UN Photo by Cia Pak

다자주의, 협력, 인권존중을 통해 안정적인 세계를 만들자는 의견과 함께 유엔 총회 고위급 토론 종료

제73차 유엔 총회 고위급 토론(high-level debate)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지역적 연대, 인권존중을 촉구하였습니다. María Fernanda Espinosa 유엔 총회 의장은 고위급 토론에서 향후 1년간 유엔 총회 활동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다고 평가하고, 각국 연사들이 세계 인권 상황을 소개함은 물론 유엔이 다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시했다며 그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Espinosa 의장은 세계 지도자들이 고위급 토론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고, 성평등(gender equality)과 안전한 국제 이주에 대해 논의한 바, 변화를 만들어야가할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 발언한 연사들은 각지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개탄하고, 보다 강력한 인도적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Richard Gallagher 교황청 외무장관은 아직도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은 재판도 없이 구금되어 있고, 아동 10명 중 1명은 아동노동에 시달리며, 2억 5,000만 명의 여성은 15세 이전에 강제결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인권선언이 채택 된지 7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사회적·인도적·문화적 사안을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 외교부 차관 및 대통령 특사를 지낸 Mahmoud Saikal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Link

General Assembly Debate Concludes Amid Calls to Foster Global Stability through Multilateralism, Cooperation, Respect for Human Rights (UN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 10.1.)

Mahmoud Saikal of Afghanistan Chair of Third Committee (UN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 10.1.)

메인화면 >>

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황희석 인권국장 **홈페이지** www.hr.go.kr **디자인** 디앤디피아

유엔,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 참여 확대 권고

UN Photo by Rick Bajornas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20차 회의 종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8월 27일-9월 21일 간 제20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기간 남아공 등 7개국에 대한 최종 견해와 일반논평 제7호(General Comment N°7)를 채택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및 감시 참여에 관한 일반논평 제7호 (제4조 제3항 및 제33조 제3항 관련)'는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대리기구를 통해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행과 감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논평 제7호는 의사결정과정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인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의사결정과정에서 제외시키는 법이 존재하는 등 현실과 원칙 사이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고, 당사국들에게 장애인을 의사결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약 제4조 제3항 및 제33조 제3항에 근거한"대리기구"의 정의, △당사국의 의무, △제4조 제3항의 전체 협약에의 적용 가능성, △법 개정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실행 방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의기간 위원회는 국제수화의 날 및 장애인권리협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Link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cludes twentieth session (OHCHR. 9.21.)

유니세프,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아동이 학교폭력 경험한다고 발표

UN Photo by JC McIlwaine

유니세프 학교폭력 실태 보고서 발간

유니세프는 폭력 근절(#ENDviolence)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 세계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폭력 근절(#ENDviolence in Schools)"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0대의 절반이 교내 및 학교주변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전세계 13-15세 아동 1억 5,000만 명이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13-15세 아동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학생들은 또한 교사로부터의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7억 2,000만 명의 아동·청소년이 체벌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어른이 훈육 목적으로 아동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관습적으로도 허용되는 국가에서 학교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Link

Violence at school an 'unforgettable lesson' faced by more than half the world's children: UNICEF (UN News Centre. 9.6)

An EVeryday Lesson: #ENDviolence in Schools

메인화면 >>

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황희석 인권국장 **홈페이지** www.hr.go.kr **디자인** 디앤디피아

유엔, 임신·출산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 권 존중 촉구

UN Photo by JC McIlwaine

유엔 전문가, 여성의 임신·출산을 포함한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후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와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공동성명을 통해 여성의 생명권, 보건권, 법 앞의 평등 등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와 낙태 관련 정보 및 제반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낙태 사후관리를 포함한 성재생산건강 관련 보건정책 수립 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장애인권리를 이유로 낙태에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장애인권리와 여성인권은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Link

Stop regress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and girls, UN experts urge(OHCHR. 9.5)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관련 성명 발표

유엔 '법률 및 법 실행에서의 여성차별 관련 실무그룹'은 '국제 안전한 낙태의 날'을 맞아 세계 각국이 낙태를 非범죄화하고, 여성의 임신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실무그룹에 따르면, 세계 2억 2,500만 명의 여성이 현대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못 하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매년 4만 7,000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500만 명이 일시적 · 영구적 장애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실무그룹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는 여성이 다른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UN Photo by JC McIlwaine

Photo by Zhu on flickr

Link

States must act now to allow safe, legal abortions for women and girls, say UN rights experts (OHCHR. 9.27)

메인화면 >>

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황희석 인권국장 **홈페이지** www.hr.go.kr **디자인** 디앤디피아

유엔,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추진

UN Photo by Loey Felip

유엔, 각국 정부에게 국제 이주에 대한 관리 개선 노력 촉구

유엔 총회는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글로벌 컴팩트는 합법적 이민절차, 윤리적인 노동기준, 인신매매 근절 등 모든 측면에서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주를 보장하기 위한 23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사회는 12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글로벌 컴팩트를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María Fernanda Espinosa 유엔총회 의장은 글로벌 컴팩트를 채택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인신매매, 이민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이주민 가족 분리(separation of families) 등을 근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습니다.

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이민문제는 정치적 이유로 왜곡돼는 경우가 많으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이민은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해 제노포비아, 불관용,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강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컴팩트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자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등 어려운 일을 감당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ink

Governments urged to 'do the hard work' to better manage global migration (UN News. 9.26.)

"The Road to Marrakech"(UN Secretary General. 9.26)

유엔 난민최고대표, 다자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난민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 (UNHCR. 10.4)

UN Photo by Amanda Voisard

UN Photo by Mark Garten

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동 기구 제69차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난민문제에 비정치적으로 접근해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Grandi 대표는 지난 2년 반 동안 세계적으로 난민이 약 20% 증가했으며, 처음으로 난민 수가 2,500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으나 다자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부유한 국가들이 국경 폐쇄를 논하는 상황에서는 난민 발생 인근 국가들에게 난민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엔난민기구는 포괄적 난민대응 프레임워크를 설립하는 등 난민에 대한 신속한 대응, 보호, 포용, 권한 강화(empowerment) 노력을 배가해왔다고 합니다. Grandi 대표는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다자주의는 난민 관련 논의에서 자주 보이는 정치적 수사와 선거용 발언들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최종안은 난민 수용국가, 원조 제공국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균형잡힌 내용을 담고 있는바, 각국이 글로벌 컴팩트를 지지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중 관련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결의안이 무표결 채택되었습니다.

언론인에 대한 공격을 처벌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각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무표결 채택되었습니다. 각국이 예멘의 평화적 이행과정(transitional process)에 필요한 역량개발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결의안이 무표결 채택되었습니다. 예멘, 부룬디, 중아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소말리아 인권상황 조사단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표결시 한국은 찬성하였습니다.

Link

Opening statement at the 69th session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High Commissioner's Programme (UNHCR. 10.1)

Grandi urges boost for multilateralism to tackle record displacement (UNHCR. 10.1)

유엔 난민최고대표, 한국방문, 법무부, 외교부, KOICA 방문 (UNHCR. 10.15)

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한국을 방문하여 법무부, 외교부, KOICA 등 정부기관과 난민 문제를 협의하고 KBS, 경향신문 등의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Grandi 대표는 한국 정부가 예멘 난민 신청자 362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예멘 난민들에게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난민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난민에 대한 불안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난민이 다른 사람보다 범죄율이 높다는 증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난민 반대 청원자들뿐만 아니라 유엔난민기구 후원자들도 유권자이며,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Grandi 대표는 한국 정부가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위험하지 않다고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Link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방한 (UNHCR. 10.15) [Click]

[앵커의 눈] 난민 신청자 '만 명 시대'…유엔난민기구 수장에게 묻다 (KBS. 10.24) [Click]

[인터뷰]"한국인들 불안 이해하지만 정부는 두려워해선 안돼"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경향신문. 10.25) [Click]

메인화면 >>

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황희석 인권국장 **홈페이지** www.hr.go.kr **디자인** 디앤디피아

예멘의 인도적 위기

UN Photo by Felton Davis on flickr

유엔 전문가 그룹, 예멘 내 전쟁범죄에 대한 보고서 발간

예멘 관련 유엔 전문가그룹*은 예멘분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3월-2018년 8월 간 최소 6,660명이 사망하고 10,563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지원을 받는 정부연합군이 고문, 자의적인 구금, 표현의 자유 박탈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고, 그 정도가 전쟁범죄로 국제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정부군과 Houthi-Saleh 반군 양측이 소년병을 징집해 전투에 참전시켰다고 합니다. 인권이사회는 제39차 회의 기간 중 이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는데,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편파적이라며 이 보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중국,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우려를 표하고 인권이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는 전문가그룹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임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분쟁 당사자들에게 국제사회가 더 이상 예멘 사태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며,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예멘 관련 유엔 전문가 그룹은 인권이사회 결의안(A/HRC/RES/36/31)에 의해 2017년 12월 설립되었으며, 그 임무는 예멘 분쟁과정에서 2014년 9월 이후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Link

Yemen: United Nations Experts point to possible war crimes by parties to the conflict (OHCHR. 8.28)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Yemen, including violations and abuses since September 2014
Human Rights Council Should Stand Firm on Yemen (Human Rights Watch. 9.21)
Human Rights Council discusses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Yemen and Libya under its agenda item on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OHCHR. 9.26.)

유엔 세계식량계획, 예멘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우려 표명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계속된 분쟁으로 지난 1년간 예멘 내 식량 가격은 35% 상승했고, 이로 인해 예멘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기아 위기를 겪고 있으며, 예멘 인구 2/3에 달하는 1,800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WFP 식량창고가 공격받기도 했습니다. David Beasley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분쟁이 계속된다면 식량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예멘인들이 현재 80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모든 분쟁당사자에게 즉각 무력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Link

Yemen: 'Time is running out' to head off devastating famine, warns UN food agency chief (UN News. 9.19)

인도, 동성애 처벌 폐지

UN Photo by Pexels

인도 대법원,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

영국식민지 시절 제정된 인도 형법 제337조는 "자연에 반하는 육체적 관계"에 10년 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제337조는 "비이성적이고, 자의적이며, 불가해한"조항이며,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인도 내에서 동성애는 범죄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많은 과거 영국 식민지 국가들이 인도 법을 참고해 법률을 제정했었기 때문에, 인도의 동성애 금지 위헌 판결이 영연방 국가들에 미치는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은 국제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유엔사무총장, 유엔 인권최고대표, 유엔 전문가들, 유엔 에이즈(UNAIDS) 사무총장, 유엔 인도사무소 등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Victor Mdrigal-Borloz 유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정체성(gender identity) 기반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 독립 전문가'는 동성애 처벌이 성소수자 차별의 근원이라고 지적하고, 다른 국가들도 국제적 인권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Link

India: Supreme Court Strikes Down Sodomy Law (Human Rights Watch. 9.6.)
UN hails 'ground-breaking' Supreme Court ruling to decriminalize gay sex in India (UN News Centre 9.6)
UN Human Rights Chief applauds Indian Supreme Court decision to decriminalize same-sex relationships (OHCHR. 9.7)
India ruling to decriminalise same sex relations is victory for equality, and other States should follow, says UN expert (OHCHR. 9.7.)

메인화면 >>

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황희석 인권국장 **홈페이지** www.hr.go.kr **디자인** 디앤디피아

테러리즘과 인권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

UN Photo by Pexels

유엔 특별보고관, 페이스북의 '테러리즘' 정의 비판

Fionnuala Ní Aoláin 유엔 '테러리즘 대응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 및 기본적 자유 보호 및 증진 특별보고관'은 페이스북 CEO에게 서한을 보내 페이스북이 테러리즘을 과하게 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이용을 규제하는 정책이 이용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테러리즘에 대한 이러한 광범위한 정의는 차별, 과도한 검열, 자의적인 규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국 정부들이 정치적 반대파를 테러리스트로 낙인찍는 일이 빈번한 상황에서 페이스북의 이러한 행보가 더욱 우려스럽다고 하였습니다.

Ní Aoláin 특별보고관은 페이스북 이용을 제한하려면 진정으로 테러를 자행할 의도가 있는 경우, 혹은 자유권 규약(ICCPR) 제19조 제3항(공공질서 및 국가안보를 해치는 경우 등에 한해 의견의 자유 제한)과 제20조(전쟁프로파간다 및 민족적·인종적·종교적 혐오에 대한 옹호 금지) 및 라바트 행동계획(Rabat Plan of Action)에서 명시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Link

UN human rights expert says Facebook's 'terrorism' definition is too broad (OHCHR. 9.3.)

미국 연방항소법원, 인종차별적 反테러리즘 광고를 거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결

미국의 보수적 시민단체 American Freedom Defense Initiative는 아시아계 및 아랍계 사람들 얼굴 위로 "글로벌 테러리즘의 얼굴들"이라는 문구를 넣은 광고를 미국 워싱턴주 킹 카운티 버스에 게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관리당국인 King County Metro (Metro)는 자체 규정상 광고가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심각하게 반대할만한 내용이라 교통체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AFDI의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AFDI는 지방법원에 Metro를 대상으로 사전금지명령을 신청했고, 기각 당하자 연방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버스 광고는 공적표현의 장이 아니며, 이 경우 특정 견해 옹호자의 발언권을 정부가 제한해서는 안 되고, 제한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특정 발언을 규제하려면 그 규정이 견해중립적(viewpoint neutral)이어야 하는데, 법원은 Metro의 규정 자체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격적인 발언(offensive speech)도 견해의 일종이고, 공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견해를 표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견해 차별(viewpoint discrimination)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고 게재를 거부한 Metro의 결정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항에 대해서는, 과거 미 국무부에서 유사한 광고를 게재할 때 교통체계가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AFDI의 광고만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후속 절차를 위해 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Link

Federal appeals court finds Washington county's refusal to run anti-terrorist bus ad unconstitutional (Jurist. 9.28.)

메인화면 >>

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황희석 인권국장 **홈페이지** www.hr.go.kr **디자인** 디앤디피아

발 간 사

유엔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지 어느덧 70년이 지났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자유, 평화, 정의 구현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을 나와 평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할 때 나의 인권도 온전히 보장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더 큰 목표들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지난 70년간 유엔은 1966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채택으로부터 금년 말에 채택하려고 준비 중인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차별을 몰아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특정 국가와의 외교적 교류는 물론 투자와 무역·공적개발원조 등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에도 그 국가의 인권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자유권규약, 사회권 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주요 국제 인권규약에 가입하며, 아시아 지역의 인권·민주주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법무부도 정부 내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직접 참석하여 우리정부의 인권증진 노력을 소개하고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청취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권 관련 국제기구 활동 소식, 국제기구의 우리정부에 대한 인권 관련 보고서, 유엔에서 결의안으로 정한 인권관련 기념일, 중요한 국제인권 뉴스 등을 종합한 국제인권 뉴스레터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인권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국민 및 인권정책 관련자들과 공유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뉴스레터가 세계 인권 동향 및 국제적 인권 보호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는 창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인권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인권에 관하여 논의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슈들을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 뉴스레터를 기획하고 발간하기 위해 노력한 인권국 인권정책과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 11. 27

법무부 장관 박상기

메인화면 >>

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황희석 인권국장 **홈페이지** www.hr.go.kr **디자인** 디앤디피아

국제인권 뉴스레터

01

JANUARY

27 January

세계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

International Day of Commemoration in Memory of the Victims of the Holocaust (A/RES/60/7)

메인화면 >>

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황희석 인권국장 **홈페이지** www.hr.go.kr **디자인** 디앤디피아

11

NOVEMBER

2 November
세계 언론인에 대한 범죄 근절의 날
International Day to End Impunity for Crimes against Journalists (A/RES/68/163)

6 November
세계 전쟁 및 무력분쟁에서의 환경오염 금지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Preventing the Exploitation of the Environment in War and Armed Conflict (A/RES/56/4)

16 November
세계 관용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Tolerance (UNESCO 28 C/Resolution 5.61; A/RES/51/95)

20 November
세계 어린이의 날
Universal Children's Day (A/RES/836(IX))

25 November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RES/54/134)

29 November
세계 팔레스타인 민족과의 연대의 날
International Day of Solidarity with the Palestinian People (A/RES/32/40B)

30 November
세계 화학전쟁 피해자 추모의 날
Day of Remembrance for all Victims of Chemical Warfare (OPCW C-10/5)

메인화면 >>

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황희석 인권국장 **홈페이지** www.hr.go.kr **디자인** 디앤디피아

12

DECEMBER

1 December
세계 에이즈의 날 World AIDS Day

2 December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Abolition of Slavery (A/RES/317(IV))

3 December
세계 장애인의 날 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S/47/3)

9 December
세계 제노사이드 피해자 추모 및 집단살해 예방의 날
International Day of Commemoration and Dignity of the Victims of the Crime of Genocide and of the Prevention of this Crime (A/RES/69/323)

10 December
인권의 날 Human Rights Day (A/RES/423 (V))

12 December
세계 보편적 건강 보험의 날 International Universal Health Coverage Day (A/RES/72/138)

18 December
이민자의 날 International Migrants Day (A/RES/55/93)

20 December
세계 연대의 날 International Human Solidarity Day (A/RES/60/209)

메인화면 >>

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황희석 인권국장 **홈페이지** www.hr.go.kr **디자인** 디앤디피아